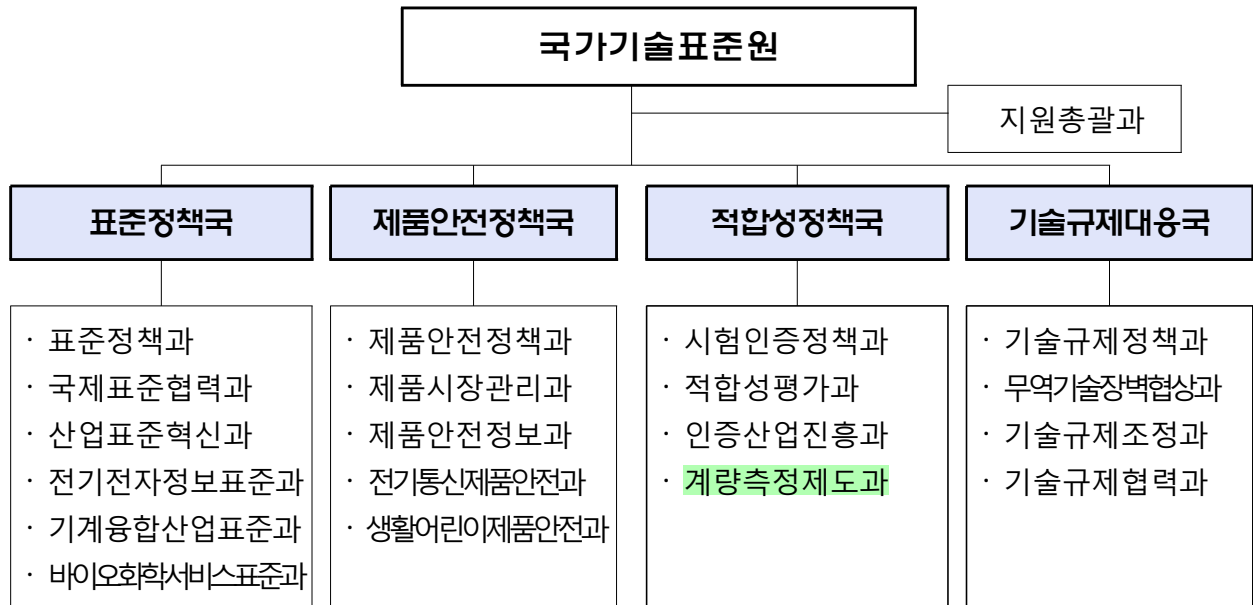

개방형직위(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) 안내 자료

2019. 7.

산업통상자원부

I. 국가기술표준원 일반현황

□ 조직 및 정원 : 4국 20과 219명



□ '19년 예산 : 1,049억원

- 인건비 168.4억, 기본경비 38.1억, 정책·기관운영 31.2억, 주요사업비 810.9억

□ 소관법령 : 계량에 관한 법률 및 행정규칙

-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
- 『형식승인·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기준』 등 행정규칙 12종
- 『수도미터 기술기준』 등 기술기준 10종

Ⅱ. 계량측정제도과장 주요 업무 내용

□ 계량·측정제도 운영 및 정책 개발

- 계량·측정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
- 계량기의 기술기준, 관련 규정 및 고시의 제정·개정·폐지
- 형식승인, 검정,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
- 법정단위 정책 운영 및 보급 확산을 위한 계획 수립·실행

□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법정계량 관리

- 법정계량기에 대한 시판품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
- 부정계량행위 단속 등 계량소비자감시원 운영
-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 계획 수립·추진
-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
- 불법·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운영

□ 계량·측정산업 발전 지원

- 계량·측정 기술 R&D 지원
- '계량측정의 날' 정부 포상 및 행사 개최
- 계량사업자 기술력 제고 및 교육
- 국제기구(OIML, APLMF 등), 일본·중국 등과의 국제협력

Ⅲ. 계량측정제도과장 당면 현안 과제

□ 계량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·제도 개선

- (추진배경) 계량기술혁신, 수요 다변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법정계량기 관리제도 등 개선이 요구됨
- (주요내용) 법정계량기 출시 사전·사후관리제도* 선진화, 정량표시 상품제도 등 계량제도 전반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
 - * (사전관리) 계량기 형식승인·검정, (사후관리) 계량기 재검정·정기검사·시판품조사, 계량소비자감시원, 불법·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운영 등
- (추진방향) 법정계량기의 민간 자율관리 확대 및 사후감독 강화, 소비자 참여형 사후관리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

□ 스마트미터링 및 차세대 계량기술 혁신 기반 마련

- (추진배경) 신재생 분산에너지원·수요관리 확대에 에너지 거래 정보 등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스마트미터링 및 계량기술 혁신 중요성 증대
- (주요내용) ①계량의 디지털혁신을 위한 '스마트미터링 보급·확산 전략 수립·이행 및 ②차세대 계량기술 혁신을 위한 신규 R&D사업 기획
- (추진방향) ①스마트미터링 관련 기술표준화, 국민참여형 계량생태계 조성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, ②차세대 계량 기술개발·기반구축을 위한 R&D사업 기획을 통한 계량기술 혁신 방향과 전략 제시

□ 측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기반 마련

- (추진배경) 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 측정 수요 증가 및 데이터의 중요성 부각으로, 데이터 품질의 근간인 측정 정밀도 관리 필요성 증대
- (주요내용) 측정 기술혁신을 위한 R&D지원, 인력양성 등 산업 육성전략 마련, 법정단위 정책 개선 등 측정 관련 제도 발전방안 마련
- (추진방향) 측정기기·서비스 등 관련 산업 육성정책 수립·시행, 측정 관련 제도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